

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

# VIP 리포트

■ 최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 
-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비정치적 접근 필요

# 목 차

## ■ 최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-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비정치적 접근 필요

Executive Summary .....	i
1. 조사 개요 .....	1
2.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.....	2
3. 시사점 .....	8
< 별첨 > 한반도 평화지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.....	9

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,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총            괄   : 이 부 형 이 사 대 우 (2072-6306, Leebuh@hri.co.kr)

동북아연구실   : 이 용 화 연 구 위 원 (2072-6222, yhlee@hri.co.kr)

          통일연구센터    이 해 정 연 구 위 원 (2072-6226, hjlee@hri.co.kr)

Executive Summary

< 요 약 >

■ 개요

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려고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통일·외교·안보 분야의 전문가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.

■ 조사 결과

**(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)** 전문가의 절대다수인 93.0%(매우 필요 69.4%+다소 필요 23.6%)는 현 시점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.

**(북한 핵·미사일 해법)** 전문가의 상당수인 63.9%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해법에 대화·제재 병행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했다. 정치성향별로는, 보수가 대북제재 강화(23.5%)에, 진보는 대화로 해결(48.0%)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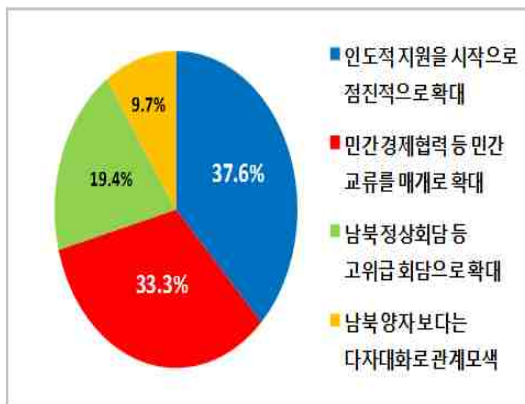
**(대북제재 효과)** 전문가의 절반 수준인 55.6%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. 정치성향별로는, 보수가 '효과 있다'(82.3%)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응답한 반면, 진보에 경우 '효과 없다'에 76.0%가 응답하는 등 성향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.

**(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법)**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(37.6%)를 비롯해 민간의 경제 협력(33.3%) 등 '비정치적 접근 방식'을 활용하여 경색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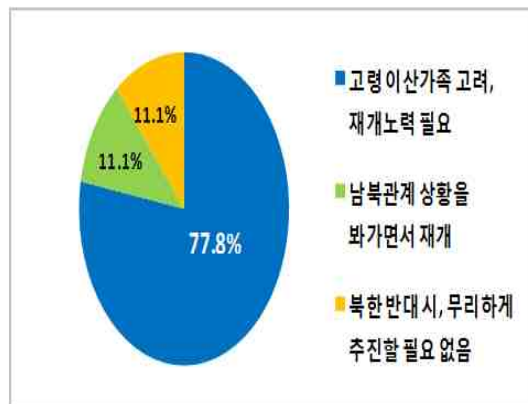
**(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여부)** 전문가의 상당수인 77.8%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관계 경색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 재개 노력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.

**(이산가족 상봉 재개 필요성)** 이산가족의 생애 상봉 시한을 고려, 조속한 재개노력(77.8%)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, 이산가족 상봉 시기는 '추석 즈음'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66.2%로 가장 높고, '8.15 광복절 즈음'(20.6%) 순으로 응답됐다.

<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법 >



<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필요성 >



**(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)** 전문가들은 5.24 조치 해제, 개성공단 재가동,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. 5.24 조치 해제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76.4%, 개성공단 재가동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6.4%, 금강산관광 재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2.2%, 6자회담 재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0.6%에 달했다.

**(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)**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며, 임기 3년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.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4.4%에 달했다. 정치성향별로도, 보수(82.4%), 중도(96.7%), 진보(100.0%) 모두 매우 높은 비율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. 남북정상회담 적정 시기로는 ‘임기 3년 내’가 55.9%로 가장 높았고, ‘임기 초반’(36.8%), ‘임기 말’(1.5%) 수준으로 응답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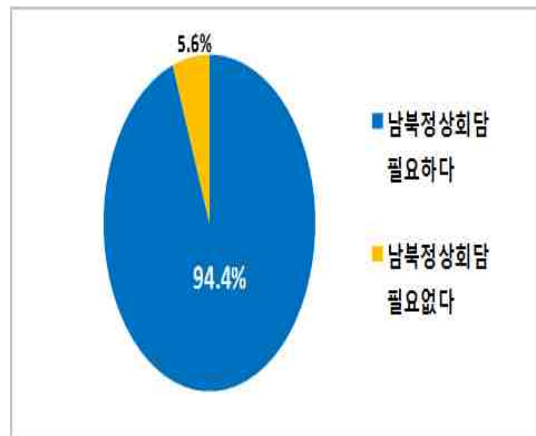
**(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특사 필요성)** 전문가들의 90.3%는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위해 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.

**(향후 남북관계 전망)** 전문가의 87.5%가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,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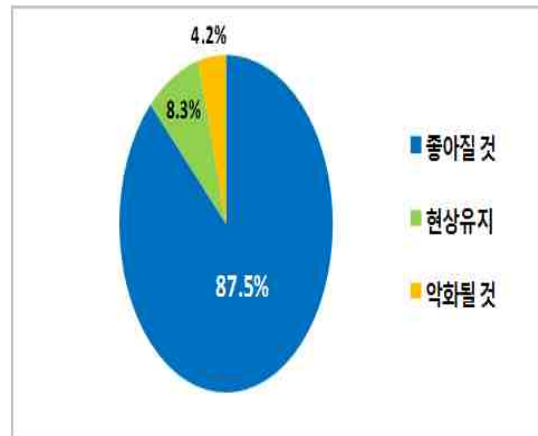
■ 시사점

비정치적 접근을 통한 국면 전환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다. 이를 위해 **첫째**, 비정치적 접근 방식을 통한 남북간 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. 정치·군사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는 우선 추진, 즉시 추진 가능한 경험 사업은 검토 후 재개해야 한다. **둘째**,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협을 관계 정상화에 활용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. **셋째**, 정부와 민간은 ‘평화를 견인하는 남북경협’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공유, 통일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.

< 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>



< 향후 남북관계 전망 >



## 1. 조사 개요

○ 현대경제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현안과 관계개선 해법을 모색하고자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

- 조사 시기 : 2017년 6월 14일 ~ 21일 (8日 간)
- 조사 방법 : 설문지 조사
- 조사 대상 : 연구원, 교수,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·외교·안보 전문가 72명
- 조사 내용 :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, 북한 핵·미사일 개발 지속에 대한 해법,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 모색,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등
- 표본 오차 :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±3.08%

### <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주요 내용 >

구분	주요 내용
① 현 시점의 남북관계	- 현 시점의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
②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	-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 지속에 대한 해법 모색 -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 평가
③ 남북관계 해법	- 남북관계 경색 타개를 위한 접근 방식 모색 -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의 필요성 -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필요성
④ 남북관계 주요 현안들	- 5.24조치, 개성공단, 금강산관광, 6자회담
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등	- 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 - 남북관계 경색 국면 전환을 위한 특사 필요성 - 남북관계 전망

## 2.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

○ (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) 전문가의 절대다수는 현 시점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

- 전문가의 절대다수인 93.0%(매우 필요 69.4%+다소 필요 23.6%)는 현 시점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

- “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귀하께서는 현 시점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”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의 93.0%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
-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보수가 29.4%로 비교적 높은 수준

<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>

	전체	보수	중도	진보
매우 필요	69.4%	41.2%	63.3%	96.0%
다소 필요	23.6%	29.4%	36.7%	4.0%
별로 필요 없음	6.9%	29.4%	0.0%	0.0%
전혀 필요 없음	0.0%	0.0%	0.0%	0.0%

○ (북한 핵·미사일 해법) 전문가의 상당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해법에 대화·제재 병행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언

- 전문가의 63.9%가 북한 핵·미사일 해법에 대화·제재 병행 방식을 강조

- “귀하께서는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 지속에 대한 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”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대화·제재 병행이 63.9%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화로 해결(30.6%), 대북제재 강화(5.6%) 순으로 응답
- 정치성향별로는, 보수가 대북제재 강화(23.5%)에, 진보는 대화로 해결(48.0%)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

< 북한 핵·미사일 해법 >

	전체	보수	중도	진보
대화·제재 병행	63.9%	70.6%	70.0%	52.0%
대화로 해결	30.6%	5.9%	30.0%	48.0%
대북제재 강화	5.6%	23.5%	0.0%	0.0%

○ (대북제재 효과)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소폭 우세

- 전문가의 절반 수준인 55.6%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없다고 응답
  - “귀하께서는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 지속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”에 대한 질문에 ‘효과 없다’(55.6%)가 ‘효과 있다’(44.4%)보다 다소 높게 응답
  - 정치성향별로는, 보수가 ‘효과 있다’(82.3%)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응답한 반면, 진보에 경우 ‘효과 없다’에 76.0%가 응답

< 대북제재 효과 평가 >

	전체	보수	중도	진보
매우 효과	6.9%	29.4%	0.0%	0.0%
다소 효과	37.5%	52.9%	40.0%	24.0%
별로 효과 없음	47.2%	17.7%	53.3%	60.0%
전혀 효과 없음	8.4%	0.0%	6.7%	16.0%

○ (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법) 비정치적 접근 방식을 선호

-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비롯해 민간의 경제협력을 활용하여 경색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
  - “귀하께서는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접근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‘대북 인도적 지원’(37.6%)과 ‘민간의 경제협력’(33.3%) 활용에 높은 비중으로 응답
  - 다음으로 ‘남북 정상회담 활용’(19.4%), ‘다자대화 활용’(9.7%) 순으로 응답

< 남북관계 경색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접근 방식 >

	전체	보수	중도	진보
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	37.6%	52.9%	23.3%	44.0%
민간 경제협력 등 민간 교류를 매개로 확대	33.3%	23.5%	43.4%	28.0%
남북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으로 확대	19.4%	11.8%	23.3%	20.0%
남북 양자 보다는 다자대화로 관계모색	9.7%	11.8%	10.0%	8.0%

○ (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여부) 전문가의 상당수는 남북관계 경색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 재개 노력은 필요하다는 입장

- 전문가의 77.8%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, 교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5.5% 수준에 불과
- “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단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결정했지만, 북한은 교류 요청을 거부한 상황입니다.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‘지속적으로 제안해야 한다’가 77.8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‘북측의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’(16.7%) 순임

<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여부 >

	전체	보수	중도	진보
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해 지속제안	<b>77.8%</b>	41.2%	<b>83.4%</b>	<b>96.0%</b>
북측의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림	16.7%	41.2%	13.3%	4.0%
북핵문제 해결 있기 전까지 교류 필요 없음	5.5%	17.6%	3.3%	0.0%

○ (이산가족 상봉 재개 필요성) 이산가족의 생애 상봉 시한을 고려, 조속한 재개노력이 필요

- 전문가의 상당수인 77.8%는 고령의 이산가족을 고려해 이산가족 상봉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
- “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경색 지속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귀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77.8%가 ‘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개’에 응답
- 다음으로 ‘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’와 ‘북한이 반대하면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 없다’가 각각 11.1% 수준으로 응답
- 한편, 이산가족 상봉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‘추석 즈음’(66.2%), ‘8.15 광복절 즈음’(20.6%), ‘2018년 설 즈음’(13.2%) 순으로 응답

<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필요성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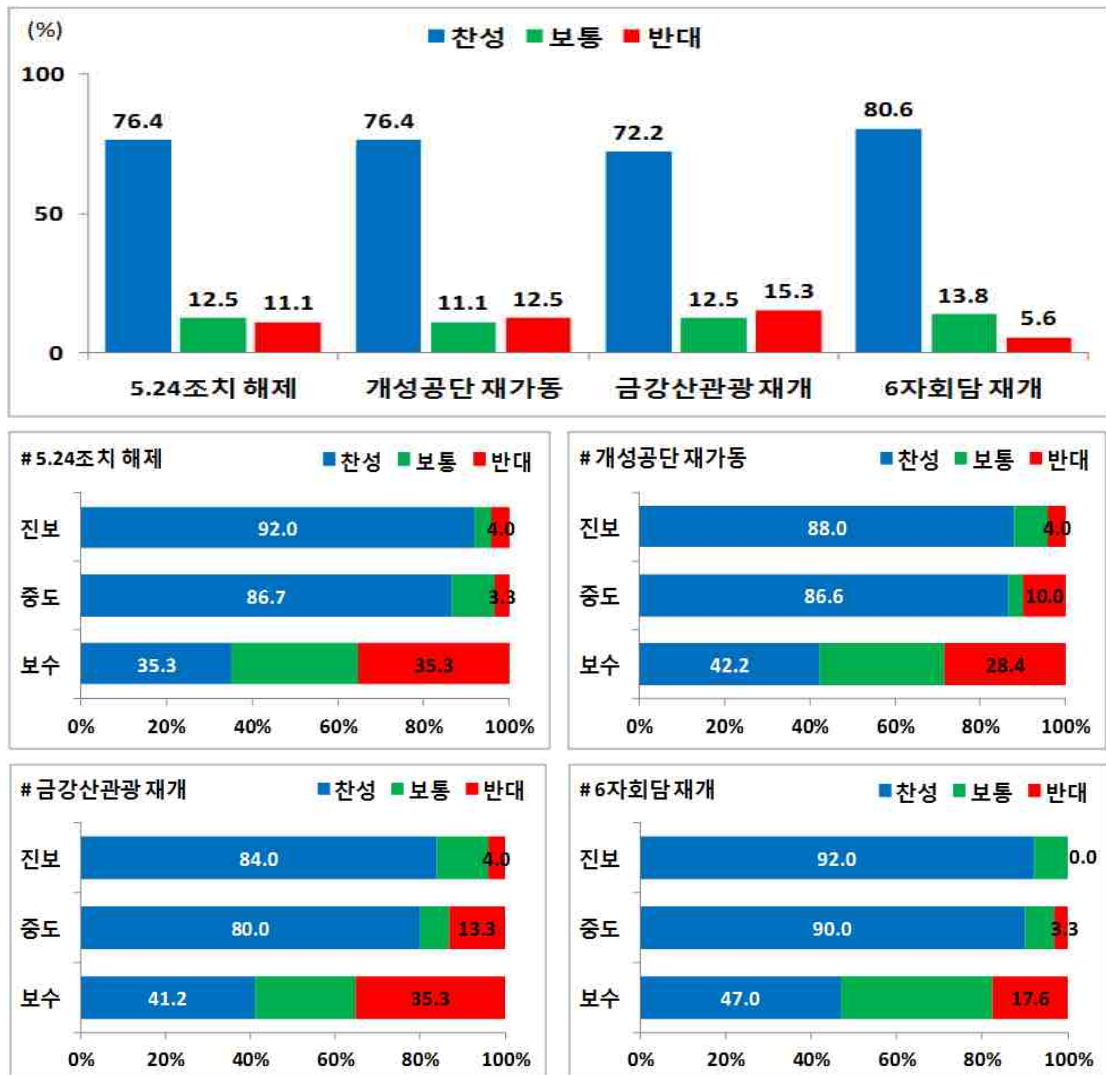
	전체	보수	중도	진보
고령의 이산가족 고려, 정치적 상황 무관하게 재개노력 필요	<b>77.8%</b>	47.1%	80.0%	96.0%
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	11.1%	23.5%	10.0%	4.0%
북한 반대 시,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 없음	11.1%	29.4%	10.0%	0.0%



○ (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) 전문가들은 5.24 조치 해제, 개성공단 재가동,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

- 5.24조치 :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.24조치 해제에 대해 찬성(76.4%)→보통(12.5%)→반대(11.1%) 순으로 응답
- 개성공단 : 2016년 2월 이후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찬성(76.4%)→보통(11.1%)→반대(12.5%) 순으로 응답
- 금강산관광 :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찬성(72.2%)→보통(12.5%)→반대(15.3%) 순으로 응답
- 6자회담 : 2007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찬성(80.6%)→보통(13.8%)→반대(5.6%) 순으로 응답

< 남북관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 >



○ (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)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임기 내 필요하다는 입장

-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4.4%(매우필요 59.7+다소필요 34.7%)에 달함
  - “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전문가의 절대다수인 94.4%가 필요하다고 응답
  - 정치성향별로도, 보수(82.4%), 중도(96.7%), 진보(100.0%) 모두 매우 높은 비율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

< 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>

	전체	보수	중도	진보
매우 필요	59.7%	17.7%	70.0%	76.0%
다소 필요	34.7%	64.7%	26.7%	24.0%
별로 필요 없다	0.0%	0.0%	0.0%	0.0%
전혀 필요 없다	5.6%	17.6%	3.3%	0.0%

○ (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) 특히 임기 3년 내의 응답이 높은 수준임

-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68명의 응답자 가운데 임기 3년 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55.9%로 가장 높음
  -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에 한해 “귀하께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언제쯤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‘임기 3년 내’가 55.9%로 가장 높았고, ‘임기 초반’(36.8%), ‘임기 말’(1.5%) 수준으로 응답
  - 기타 의견으로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, 정상회담 개최 여건 충족 시, 2018년 즈음 상황에 따라 등으로 응답

< 남북정상회담 시기 >

	전체	보수	중도	진보
임기 초반	36.8%	14.3%	38.0%	48.0%
임기 3년 내	55.9%	71.4%	58.6%	44.0%
임기 말	1.5%	7.2%	0.0%	0.0%
기타	5.8%	7.1%	3.4%	8.0%

○ (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특사 필요성) 절대다수가 특사 파견에 찬성

- 전문가들의 90.3%는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위해 특사 파견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
  - “귀하께서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 전환을 위한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전문가의 절대다수가 찬성에 응답했고, 반대의 입장은 9.7%에 불과한 수준

< 대북 특사 활용 필요성 >

	전체	보수	중도	진보
찬성	90.3%	76.5%	93.3%	96.0%
반대	9.7%	23.5%	6.7%	4.0%

○ (향후 남북관계 전망) 전문가의 다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

- 전문가의 87.5%(매우 좋아짐 11.1%+다소 좋아짐 76.4%)가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
  - “귀하께서는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‘다소 좋아짐’(76.4%)→매우 좋아짐(11.1%)→현상유지’(8.3%) 등으로 응답되었고, ‘악화’의 의견은 4.2%(다소 악화 2.8%+매우 악화 1.4%)에 불과
  - 정치성향별로는, 보수(70.6%), 중도(66.7%), 진보(92.0%) 모두 ‘다소 좋아짐’에 높은 수준으로 응답

< 향후 남북관계 전망 >

	전체	보수	중도	진보
매우 좋아질 것	11.1%	5.9%	20.0%	4.0%
다소 좋아질 것	76.4%	70.6%	66.7%	92.0%
현 상태 지속	8.3%	11.8%	10.0%	4.0%
다소 악화될 것	2.8%	5.9%	3.3%	0.0%
매우 악화될 것	1.4%	5.8%	0.0%	0.0%

### 3. 시사점

- **비정치적 접근을 활용한 국면 전환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필요**
  - **비정치적 접근 방식의 남북간 협력사업 우선 추진** : 정치·군사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는 우선 추진, 즉시 추진 가능한 경협 사업은 검토 후 재개
    -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정치·이념적 갈등 가능성이 낮으며,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인도적 지원 사업부터 우선 추진
    - 남북간 사회·문화 교류 확대와 함께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마음 얻기 추구, 북한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및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시장경제 교육 확대는 통일 비용 축소에도 주효
  - **남북경협을 활용** :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협을 관계 정상화에 활용하는 정책 도입 필요
    -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시장화 촉진으로 아래로부터의 변화 유도, 변화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‘bottom-up 방식’의 남북관계 정상화 모색
    - 남북경협이 정치·군사적 영향으로 중단되거나 정체되지 않도록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간 통일 공감대 형성을 도모
  - **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리 접근** : 정부와 민간은 ‘평화를 견인하는 남북경협’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공유, 통일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추진
    -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속에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남북경협이 평화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
    - 정부는 경협 활성화 토대 강화를 위해 평화 정착과 제도화 모색, 민간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(win-win)의 사업 발굴

이용화 연구위원 (2072-6222, yhlee@hri.co.kr)

이해정 연구위원 (2072-6226, hjlee@hri.co.kr)

< 별첨 > 한반도 평화지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

1. 조사 개요

- 조사 시기 : 2017년 6월 14일 ~ 21일 (8日 간)
- 조사 방법 : 설문지 조사
- 조사 대상 : 연구원, 교수,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·외교·안보 전문가 72명
- 표본 오차 :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±3.08%

2. 조사 내용

□ 남북관계 분석 및 전망

1. 정치·군사 관계(3개월 전과 비교해 볼 때)

1-1)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

항 목	2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16.7
2. 그렇지 않다	33.3
3. 보통이다	36.1
4. 그렇다	12.5
5. 매우 그렇다	1.4
계	100.0

1-2)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

항 목	2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15.3
2. 그렇지 않다	37.5
3. 보통이다	37.5
4. 그렇다	8.3
5. 매우 그렇다	1.4
계	100.0

1-3)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나아지고 있다

항 목	2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20.8
2. 그렇지 않다	44.4
3. 보통이다	27.8
4. 그렇다	5.6
5. 매우 그렇다	1.4
계	100.0

1-4) 북한의 내부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다

항 목	2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1.4
2. 그렇지 않다	9.7
3. 보통이다	36.1
4. 그렇다	47.2
5. 매우 그렇다	5.6
계	100.0

1-5) (종합) 전반적으로 남북 간 정치·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

항 목	2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15.3
2. 그렇지 않다	41.7
3. 보통이다	36.1
4. 그렇다	5.6
5. 매우 그렇다	1.4
계	100.0

1-6) (전망) 3개월 후 남북 간 정치·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

항 목	2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1.4
2. 그렇지 않다	18.1
3. 보통이다	33.3
4. 그렇다	44.4
5. 매우 그렇다	2.8
계	100.0

2. 경제적 관계(3개월 전과 비교해 볼 때)

2-1)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었다

항 목	2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12.5
2. 그렇지 않다	55.6
3. 보통이다	26.4
4. 그렇다	4.2
5. 매우 그렇다	1.4
계	100.0

2-2)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

항 목	2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1.4
2. 그렇지 않다	13.9
3. 보통이다	30.6
4. 그렇다	48.6
5. 매우 그렇다	5.6
계	100.0

2-3) 북한 경제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

항 목	2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6.9
2. 그렇지 않다	30.6
3. 보통이다	52.8
4. 그렇다	8.3
5. 매우 그렇다	1.4
계	100.0

2-4)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

항 목	2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0.0
2. 그렇지 않다	22.2
3. 보통이다	36.1
4. 그렇다	40.3
5. 매우 그렇다	1.4
계	100.0

2-5) (종합)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

항 목	2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12.5
2. 그렇지 않다	40.3
3. 보통이다	41.7
4. 그렇다	4.2
5. 매우 그렇다	1.4
계	100.0

2-6) (전망) 3개월 후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

항 목	2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5.6
2. 그렇지 않다	9.7
3. 보통이다	36.1
4. 그렇다	47.2
5. 매우 그렇다	1.4
계	100.0

3. 사회·문화·인도적인 관계(3개월 전과 비교해 볼 때)

3-1)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(문화,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)가 활발해졌다

항 목	2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8.3
2. 그렇지 않다	38.9
3. 보통이다	33.3
4. 그렇다	18.1
5. 매우 그렇다	1.4
계	100.0



3-2)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

항 목	2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15.3
2. 그렇지 않다	47.2
3. 보통이다	29.2
4. 그렇다	5.6
5. 매우 그렇다	2.8
계	100.0

3-3)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증대되었다

항 목	2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5.6
2. 그렇지 않다	29.2
3. 보통이다	43.1
4. 그렇다	19.4
5. 매우 그렇다	2.8
계	100.0

3-4) (종합)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·문화·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

항 목	2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6.9
2. 그렇지 않다	40.3
3. 보통이다	43.1
4. 그렇다	8.3
5. 매우 그렇다	1.4
계	100.0

3-5) (전망) 3개월 후 남북 간 사회·문화·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

항 목	2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0.0
2. 그렇지 않다	11.1
3. 보통이다	27.8
4. 그렇다	59.7
5. 매우 그렇다	1.4
계	100.0